

# 대법원 2024도13790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으로 당선된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 'SNS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A와 공모하여, ① 2021. 7.경 홍보담당자 B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고, ② 2021. 8.경 홍보담당자 B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고, ③ 2021. 9.경 홍보담당자 B에게 현금 400만 원을 제공하고, ④ 2021. 10.경 홍보담당자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운동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인터넷 게시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①공소사실 중 200만 원 제공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3790 판결)

## 1. 사안의 개요

###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인 ⇒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으로 당선된 사람
- A, B, C ⇒ 피고인의 선거 캠프에서 피고인의 SNS 홍보활동 등을 담당한 사람들

### 나. 공소사실의 요지 ➡ 공직선거법 위반

- 피고인은, 피고인이 A에게 금원을 교부하면 A가 이를 B 등에게 피고인의

SNS 홍보활동 등의 대가로 제공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기로 A와 공모함

■ B에 대한 금원 제공

-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A에게 현금 300만 원을 초과하는 불상 액수의 현금을 교부하고, A는 같은 날 B에게 피고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에 글을 게시하는 등 피고인의 SNS 홍보활동을 하고, 피고인을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함 ⇒ ①공소사실
-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B에게 피고인의 SNS 홍보활동을 하고 피고인을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함 ⇒ ②공소사실
-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B에게 같은 명목의 대가로 현금 400만 원을 제공함 ⇒ ③공소사실

■ C에 대한 금원 제공

- A는 2021. 10. 17.경 C가 같은 해 8. 말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에 글을 게시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등 피고인의 SNS 홍보활동을 한 대가로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함 ⇒ ④공소사실

-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B, C에게 피고인의 SNS 홍보활동에 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한 대가를 제공하고, 당해 선거구 안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자인 B, C에게 기부행위를 함

## 2. 소송경과

### 가. 제1심 ➡ 일부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①공소사실 ⇒ 유죄

■ ②, ③, ④공소사실 ⇒ 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 나. 원심 ➡ 일부 유죄[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①공소사실 ⇒ 200만 원 부분 유죄, 나머지 이유 무죄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정한 '수사기관 이외의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는데, 제1심에서 문답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됨
- 피고인이 2021. 7. 중순경 A에게 B 등에 대한 SNS 홍보 활동 대가 지급 용도로 액수 불상의 현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21. 7. 중순경 A와 공모하여 B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함
- 인터넷 게시 관련 금품 제공과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함

■ ②, ③, ④공소사실 ⇒ 제1심 무죄 판단 유지

### 3. 대법원의 판단<sup>1)</sup>

#### 가. 쟁점

-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B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나. 판결 결과

-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수긍)

#### 다. 판단 내용

---

1) 피고인만 상고하여 유죄 부분인 ①공소사실 중 200만 원 부분만 상고심의 심판범위임

- ▣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 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